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공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2009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發刊辭

2008
7 21 ‘
9 10 ‘5+2
, 12 15 ‘2

4

,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철

색무취한 획일적 계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도 정해진 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의 선순환구조의 창출이 미흡하였다.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정책체계와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제한적인 성과에 머무르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을 예로 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균형발전정책도 역시 균형특화계획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만연하였으며 시·도간 안배방식을 답습하였다.

자본, 노동, 정보, 금융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국가 주도의 자원배분체제 보다는 지역단위에서 각자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Local Governance)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으로 자원배분의 규모화, 집적화를 요구하며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기업-자치단체-주민-전문가 사이의 전략적 일체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조류에 조기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간을 재구축하는데 있다. 산술적 균형(Balance) 보다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균형(Equilibrium)을 추구하며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권형 시스템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인 배분을 지양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도토리 키재기식’ 보다는 절대적인 발전역량을 고양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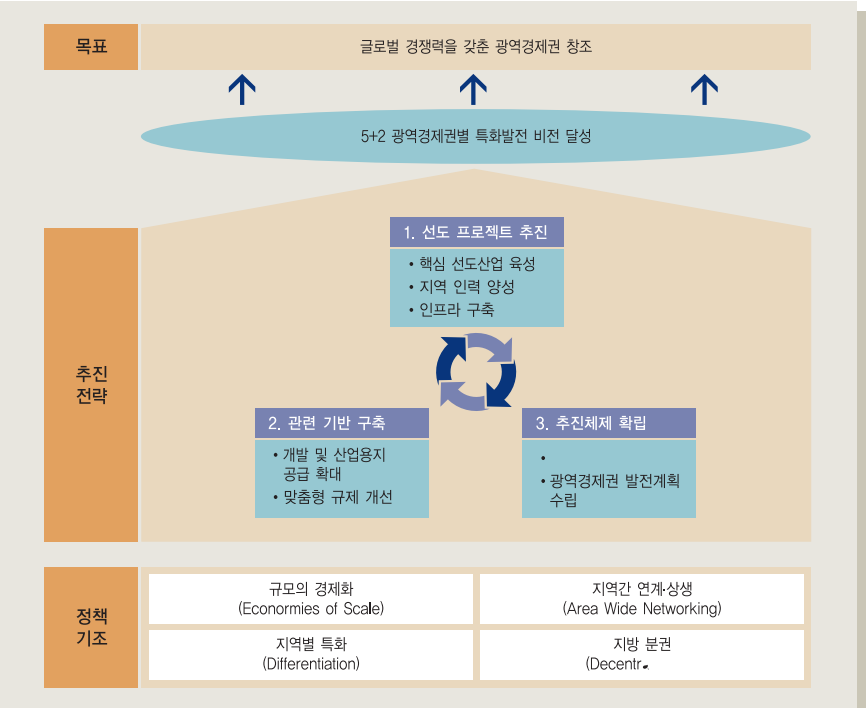
3.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추진

1)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개요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발전이 핵심이다. 권역별 특화 발전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① 권역별 핵심 선도프로젝트 추진, ② 규제 완화·폐지 등 선도프로젝트 추진기반 구축, ③ 권역에 참여하는 시·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의체(광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선도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용지 확대, 맞춤형 규제완화 등 기반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5〉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는 소위 3위일체적 전략 즉, ①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 육성(3년간 9천억원 투자), ② 30개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투자), ③ 인력양성(권역별 1~2개 거점대학 육성, 5년간 3,500억원 투자)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권역별로 1~2개) 연구개발, 특허,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전방위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2009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년 내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목표 지향적 추진방식을 도입하여, 수출 60억달러 일자리

7개 정책군 중 마지막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는 낙후지역 대상 지역개발종합사업으로 내용상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군으로 통합하였다. 5개 부처가 분산·추진한 15개 낙후지역 개발사업(1조 3,082억원)은 자치단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패키지사업 형태로 지원하며 성장촉진지역, 일반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

- 성장촉진지역 : 경제력, 재정력, 기본인프라 등이 매우 낙후된 지역
- 특수상황지역 :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입지조건이 매우 특수한 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 일반시, 행정구가 있는 시
- 신성장거점지역 : 기타 시·군

〈표 10〉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정책군에 포함되는 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 시·군	'08년 예산 (억원)	사업내용
① 행정안전부 - 접경지역 지원 - 도서지역 개발 - 소도읍 육성 -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125 15 37 36 37	2,225 511 954 464 296	- 도로, 마을회관 등 정주환경 개선 - 생산, 생활기반시설 확충 - 생활편익, 소득·문화기반시설 등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② 농림수산식품부 - 신활력지원 - 농촌생활환경정비 - 농촌마을종합개발 - 전원마을 조성 - 어촌종합개발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468 70 243 101 39 15	6,936 1,882 3,109 1,235 103 298 309	-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 - 면단위 기초생활환경 정비 -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 생활환경 개선, 생활·소득기반 확충 - 급수취약지역 지하수 개발 등
③ 국토해양부 - 개발촉진지구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154 34 88 32	3,099 1,816 1,133 150	-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심불량주거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정비 - 시범도시·마을 인센티브
④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조성	57 57	228 228	-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시설 등
⑤ 환경부 -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15 15	594 594	-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표 1〉 통치와 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통치	거버넌스
추진 조직	조직형태	집중형태	분산형태
	지도층	정부 공무원	모든 이해당사자간 협상 주도자
	조직가치	전통적인 자본의 축적	사회적 자본 축적
	조직의 공동 목표	국가형성	시민사회 구축
추진 방식	권한행사방식	계층적, 일방적	모든 이해당사자간 공유
	의사결정 방식	다수결에 의한 지시와 통제	역할에 따른 다자간 협상
	정보생산능력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공부문(민간부문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	소비자 혹은 의뢰인	소비자인 동시에 공동 생산자
	자원조달체계	내생적 자원투입 위주	내·외생적 자원결합

출처 : 소진광(200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p98.

NGO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 파트너로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정부개혁의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유형¹⁾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응용되었다.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어떤 부문도 조직적·제도적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과 부문을 가로지르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Kooiman, 1993: 35).

NGO와 지방정부는 비영리·공익분야를 담당하고, 사회적·공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도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NGO와 지방정부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질 수 있다(石川縣, 2002: 5).²⁾

참여적 거버넌스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사례로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등의 사례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거버넌스 사례가 점진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 LEADER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EU 회원국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환경보존이나 토지관리 및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문제 등의 사업에 지원되었다.
-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요소
 - ① 인구 1만 명~10만 명 이내
 - ②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
 - ③ 동질적이고 응집성이 강한 지역
 - ④ 전통과 정체성의 공유
 - ⑤ 수요와 기대를 공유
 - ⑥ 응집성과 결집력
 - ⑦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는 불필요

〈그림 1〉 EU LEADER 프로그램 개요



자료 : EC(2006).

(2) 추진주체 -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

• 구성

LEADER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조직은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 LAG)으로 지역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LEADER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LAG는 민·관 파트너를 아우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기업, 시민이나 시민단체, 지역정치단체, 환경단체,

문화 및 봉사, 미디어 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등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다. 이들은 조직 활동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애니메이터(animator)들로 역할을 분담한다.

- 시민, 주민, 지역 관련단체
- 전문가 조직, 노조나 농업 및 비농업 관련단체, 기업 등
- 환경관련 단체
-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 문화 및 지역서비스 제공자(언론기관 포함)
- 외부 네트워크나 연구조직

LAG는 지역농촌개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LAG는 LEADE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단계에서는 민간과 관련 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이

9.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Pierre Laffitte의 비전을 바탕으로 설립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 연구 단지로 현재 1,200여 개의 기업 유치 및 2만 6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복합 단지이다.

1) 개요

〈그림 10〉 소피아 앙티폴리스 현황



-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 연구단지
 - IT, 의학/생명과학, 에너지
- 세계적인 휴양도시 니스에 인접
- 2,300ha (약 690만명)
- 1,200개 기업, 2만 6천여명

소피아 앙티폴리스 주요활동



- 1960년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비전제시
- 추진기구 설립
- 1984년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 설립
 - 국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지원
 - 각종 문화활동 지원
- 1990년대 초반까지 네트워크 미형성
 - 입주업체간 교류가 없고 창업기업 부진
-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
 - INRIA와 같은 대규모 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과 창업을 장려하면서 Spin-off출현
 - 정부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 Club : 각종 전문가와 기업이 단체 형성
- 각종 문화행사 개최

2) 사업내용

(1) 개발방향



운영체계

주요 내용

도시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자연과의 조화, 환경을 고려한 저밀도의 도시 만들기를

소피아 앙티폴리스개발주식회사가

(2) 성공요인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니스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라피트의 역량, 프랑스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소피아 앙티폴리스 성공의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수도 파리의 과밀 해소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276개 기업의 유치 및 26,63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

된 지역 연고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된다.

여섯째, 지역 연고 산업의 공급 측면(supply side)⁴⁾에 대한 검증은 위해서는 연고산업 업체 및 인력 기반, 진입장벽, 하드웨어 기반, 저비용 R&D 기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역 연고 산업의 공급 측면에 대한 검증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지역 연고 산업의 기본적 생산능력 파악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III 국내사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화 또는 혁신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류 방법에 의해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라 함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다. 다만 잠재력과 현실 간의 격차 및 정책 변화 등과 같은 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두 번째,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려면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 전반에 걸쳐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갖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과의 동반자적 관계의 성공적 유지가 필수적이며, 기술개발 및 양산 역량 확보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의 기반(fundamental) 확보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초기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선발 주자와의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후 차별화된 경쟁력도 불분명한 전망으로 국가 차원, 대기업 차원의 전략적 투자 육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힘든 사업이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산업 경쟁력의 기반(fundamental)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라 함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소수 기능 인력들이 영세한 방식으로 제작·공급하는 공방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산업 기반의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산업으로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Footnote

⁴⁾ 경제의 안정 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위해 감세나 기업의 투자 확대 촉진법을 만들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자체는 이상의 네 가지 관점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속하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사업이 실행되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위의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분류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성공 사업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1-1. 해양심층수 사업

1) 개요

해양심층수는 다량의 영양 염류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연구가 진척될수록 활용범위가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다.

〈그림 12〉 해양 심층수의 정의 및 특성



〈그림 13〉 해양 심층수의 다양한 활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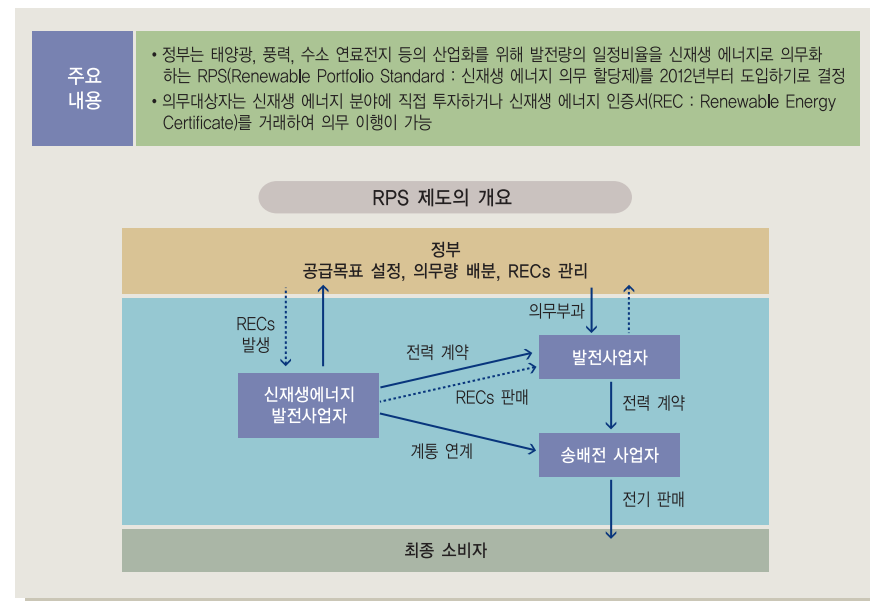
에너지원	• 하절기 냉동, 냉방, 냉장, 제빙 등 • 온도차 발전(OTEC)	식음료품	• 음료, 생수, 주류 제조 • 식중독 방지제 • 소금제조 • 김치류, 염장류, 과자류 등
의학분야	• 혈행개선제, 항암제 개발 • 항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 당뇨약, 투석액, 신약 제조 • 의약부외품 제조		

-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는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의무대상자를 위한 RECs(재생에너지증권) 구매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초기 시장안정화를 위해 RECs의 자유 거래가 제한되었지만,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조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뤄질 것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우수한 시설 장비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안정적 전력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전력 시설의 송배전 및 전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신규 건물의 경우 전기·가스 이외에 지열·풍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조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라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이 20~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8〉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출처 : 냉동공조 2008년 12월호, 한국냉동공조협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4.

이 글에서는 지역간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Ⅱ장과 Ⅲ장에
서 구체적인 국내외 제도와 사례 검토)를 제시하여 지역간 협력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살
펴보도록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Ⅱ	해외사례

1.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제도

1) 개요

유럽연합(EU)은 1988년 이전까지 각종 정책과 함께 지역정책의 수행체계를 고민하다가, 지
역정책의 재원인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운영지침인 리스본 전략을 마련하면서 EU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EU의 지역
정책은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회원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경제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가간, 행정구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하나
의 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간 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이 국경간,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고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
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Interreg Community Initiative(이하 Interreg)이다. 먼저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지역정책에서 Interreg 프로그램이 갖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요내용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1975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고, 1988년 전후에야 지역정책의 원칙과 위상이 정립되기 시
작하였다(박경 외, 2008). 그 이후 유럽 전체 차원의 지역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대규
모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³⁾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이사회의 모
임에서 채택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계기로 EU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리스본전략과 구조기금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지역발전정
책을 수립하게 된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제1차 계획(2000~2006)을 수립·완료하였으며, 최

Footnote

³⁾ 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하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이하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이하 CF)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금에 따라 사용목적이 구분되어 있다.

영하고 있다. 1976년 세라믹 센터(Center Ceramico)를 시작으로 산업별 서비스 센터가 먼저 설립되었으며, 범산업적인 서비스센터로 지역기술이전센터(ASTER)를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가 설립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센터는 크게 5개의 산업별 서비스센터와 4개의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ERVERT 시스템의 서비스센터

구분	센터명	활동분야 및 주요 내용	입지	설립연도
산업별 서비스 센터	CITER	섬유·패션사업의 지원	Carpi	1980
	CESMA	농기계산업 지원	Reggio Emilia	1983
	CERCAL	신발·가죽산업의 지원	San Mauro Pascoil	1983
	QUASCO	건설산업 연구·인증 서비스	Bologna	1986
	Centro Ceramico	세라믹산업 지원	Bologna / Sassuolo	1976
범산업적 서비스 센터	ASTER	지역기술이전 촉진	Bologna	1985
	CERMET	품질연구·인증 서비스	Bologna	1985
	DEMOCENTER	산업자동화 서비스	Modena	1990
	QUASAP	공공사업 수·발주 관리	Bologna	-

ERVERT는 제도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준공공의 법인체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RVERT 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지방정부-민간-기타 공공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30,475,585 유로인데, 그 비중은 지방정부 42%, 유럽연합 14%, 민간 38%, 기타 공공기관 3%를 충당하고 있어, 민간의 지원(다시 말해서, 민간의 참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ERVERT System 재원 구성



